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9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6일(금)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

(16시33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부승찬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및 정부 측 참석자들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제가.

○위원장 성일종 예,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3분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상황이 워낙 그러니까.

일단 어제 국방부차관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수방사령관 또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 정지와 분리 파견 인사 조치를 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미 탄핵은 여의도 우리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의 선을 넘어선 이미 국민적 민심이 됐고 그 민심이 성난 민심이 되고 있으며 돌풍처럼 지금 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역사적 대세로 굳혀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와 함성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즉각 체포·수사일 것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손발,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계엄사와 관련된 여러 3사 사령관은 물론이고 또 계엄사령관 또 경찰청장 더 나아가서 저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절차적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선별적으로 소집했고 그 안에서 국무위원들이 했던 발언들 그리고 저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그 직후에 법무부에서 주요 간부들의 긴급대책회의, 계엄을 전제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거기서 출입국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을 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이 내란·계엄에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수사를 누가 할 것이냐? 내란의 수괴와 내란의 여러 공동정범들과 방조범들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라는 중차대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검찰의 입장을 보십시오.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엇그제만 해도 별때처럼 검사들이 일어나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대세가 바뀐 것을 알고 무슨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한들 과거에 지금까지 벌어졌던 역사적 많은 퇴행을 과연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군검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혁 검찰단장,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구속영장을 치고 또 수사 왜곡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번에 징역 3년의 구형을 했던 장본인 중의 장본인입니다. 거기서, 군검찰에서 발동되는 수사권이 과연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추상 같은 그리고 검찰과 군검찰 조직 내의, 경찰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절절한 진정 어린 자성의 목소리, 성찰의 목소리가 조직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지검의 어떤 검사가 이프로스에 무슨 입장들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참으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러한 검찰의 민낯을 보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가 이 이후의 탄핵 국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의지를 받드는 수사의 주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방위에서는 저는 군검찰단 역시 김동혁 검찰단장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 대행께서 새로운 성찰의 임무를, 검찰단장을 임명하고 즉시 수사 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윤석열과 국방부의 눈 가리고 아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천에 있는 여인형이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대기발령입니까? 대기조치입니까?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 5분, 10분이라도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다 잡아들이고 전체를 싹 쏘아 버리고 선관위를 유린시킨 자를 국방부에 대기발령, 대기조치 말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수도군단에 내려가는 광종근, 이제 특전사·수방사 동원 못 하니까 수도군단 동원해서 또 계엄하려고 합니까? 여전히 방첩사는 제2계엄의 헤드쿼터로 남아 있고? 이진우 지작사령관, 전방에서 데려올 부대 없으니까 후방 사단 동원해 가지고 광종근과 함께 또다시 용산에 들어간 여인형과 쿠데타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보직 대

기예요, 그것 누가 결정한 겁니까? 결국은 각 군 총장 특히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육군 총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보직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현 상황에 걸맞은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장 대통령은 파면시키고 이들은 내란죄로 구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국방위 결의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바로 파면하고 구속하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대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무대리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들과 함께 쿠데타 했던 사람들이예요. 수방사령관의 김호복, 특전사령관의 박성제, 방첩사 이경민, 그러니까 오히려 동원할 수 있는 체제와 범위가 넓어졌다 이겁니다. 세 사령관 플러스 지작사, 수도군단, 국방부,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직무·보직 조치를 한 것 같지만 실은 제2의 쿠데타를 위한 전선을 확대하고 역량 가동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는 바로 지금이라도 여야 국방위가 동시에 함께 하나가 돼서 파면과 구속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 위원 국방위가 어제 열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헌문란의 내란이나, 이게 여러 가지 시비도 있고 공방이 있고 각자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해진 것은 뭐냐 하면 어제 국방위 이후에 지금까지 계엄군으로 직접 참여했던 병사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원 1차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특수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의 양심 고백도 있었습니다. 직접 계엄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에 의해서 또 안보 관계자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수사도 필요 없는 100% 사실인 거지요. 거기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헌법 77조, 계엄법 4조·13조 등등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위반한 국헌문란,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의 체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예하부대 사령관들이 그 상황을 관리하고 보고하고 이런 과정들이 직접 계엄군으로 참여한 군인들의 증언을, 양심 고백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이번 비상계엄의 성격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국헌문란이고 이것은 분명한 내란죄에 적용된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모든 국회가 동원돼서 이 내란죄를 더욱더 밝혀내고 처벌하는 데 모두가 여야가 합쳐서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감사합니다.

12·3 친위 쿠데타 주모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사실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엄군을 직접 지휘한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직만 그만두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소재도 불명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대상자입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여러 곳에서 수사를 하고 또 합동수사본부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긴급체포입니다.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부대를 보내서 국회를 마비시키고 저를 포함해서 주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1차장에게 직접 이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국정원법의 명백한 위배입니다. 국정원법상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국정원법을 위반해서 1차장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역시 헌법 위배이고 국가 전복 행위인데 그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12월 3일 친일 쿠데타의 주모자 중에서 보면, 오늘 발표를 보게 되면 주요 장성급 장교 직무정지가 되었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선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모두 지금 국방부에 대기발령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모두 군사반란의 주모자에 해당되고 서로 공모하고 역할 분담한 사람들입니다. 즉시 긴급체포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말 맞추기를 하는지 어떤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직무정지가 된 대상 부대 중에서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사령부 포함해서 여러 군데 동원된 부대의 증거 자료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에 국방부차관께서 모든 자료를 갖다가 건드리지 마라는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이 지휘부서 같은 경우는 조만간 군사반란죄로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게 되면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안에 있는 컴퓨터 정보이건 또는 그냥 종이 정보이든간에 그것을 빨리 국방부 차원에서 또는 합참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아까 직무정지 하고 대기발령이 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현재 장군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직무정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과거에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는 이등병 강등 후 감찰과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를 향의 방문하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만나서 양심 고백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 비상계엄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국방위에 3명이 출석을 해서 더 세부적인 것을 질의하는 것이 마땅한데 3명의 참석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방사령관 여기 온다고 출발까지 한다고 해서 면담도 줄였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제가 이 계엄에 대해서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면담한 결과 내린 결론은 충암과 3인—즉 윤석열 씨,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3명 다 충암고 출신입니다. 충암고 출신의 충암과의 핵심 3명에 의해서 내란이 획책되었다, 그리고 내란을 지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국격을 손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도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군은,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은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해서 임무는 수행은 했지만 수행 과정에서는 절제 있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직접 지휘했다, 먼저 특전사령관에게 작전 중간에 지휘를 해서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 부대 이동 상황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이 확인을 했습니다. 수방사령관에게도 직접 확인을 해서 현재 국회 앞 상황이 어떻느냐, 이때 수방사령관은 국회 앞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방사령관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경찰과 뒤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실질적으로 나름의 절제 있는 노력을 한 것 중에 놀라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특전사령관은 중간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침투했을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하나 받습니다.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였습니다. 이것은 정족수를 채우는 걸 막기 위한 거였을 겁니다. 특전사령관은 이것이 너무나 위법하기 때문에……

2분만 더 주세요.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항명죄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가 실제 국회를 01시 02분에 통과했을 때 그것을 듣고 바로 병력을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철수시키면서 실제 장관에게 통보형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공포탄이라든가 전기충격기 같은 건(gun) 이런 것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민간 피해를 줄였습니다.

수방사령관은 실질적으로 장갑차 출동을 금지를 시켰고 그리고 현장에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고 해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투입된 인원들의 소총을 차량에 놔둔 상태에서 소총 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번 내란죄는 너무나 큰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암과 3인방에 의해서 획책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김용현 빨리 찾아서 체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여인형 빨리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관련자들은 보직 해임이 됐는데 빨리 수사를 착수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 재발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은 기본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거듭 강조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중 추미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를 한 것은 정말 천만다행인 일이었고요. 하마터면 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대통령의 불법 계엄 획책으로 중단될 뻔 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것을 막아 냈다는 것은 하늘의 도움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이 사건을 규정해야 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검찰 정권은 쿠데타 정권이라 봤습니다. 쿠데타 정권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전복하면서 영구집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 부패, 권한남용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다음 정권에 의해서 신분, 신변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늘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 세력은 전체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이른바 충암파라고 하는 사조직을 통해서 군을 권력 기반으로 삼고 영구집권의 친위 쿠데타를 전개한 것이다, 이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엄령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반대 세력의 결집과 국민적 저항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점령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707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를 투입했습니다. 그 후에 체포된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과천 육군 방첩사령부 지하병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또한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국회해산권이 사라진 이후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영구히 해산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던 데서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국회의원 체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를 해산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친위적인 정치 질서를 만들려고 했다고 봐집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권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되었던 것인데요.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양구군청에도 군인들이 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양구군청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우외환을 조장을 해서 북한과의 무력 분쟁을 조장해 계엄의 필요성과 그 유지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는 사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시에서 4시 사이 당일 국회가 해산, 계엄 해제를 했으면 즉시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권고하는 그런 업무를 보지 않고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합참의 지하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2차 계엄 선포를 또한 준비했다고 봐집니다. 실시간 상황을 점검하면서 여의치 않자, 불발이 되자 시간을 벌어서 앞으로 재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피의자가 되어야 할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오기 전 사표를 썼지만 그의 사표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면 즉시 그의 사표도 수리가 됐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아까 조국 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국정원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를 것을 지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2017년 기무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엄 문건에 있는 실행 방안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봐집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추미애 위원 이렇게 사전에 준비된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사건 사태 발생, 윤석열 내란 사태, 지금 이후에 2일차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당 관련자들을 이 자리에 부르지 못하고 사안의 신속성과 급박성, 증거 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다른 위원님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안규백 위원님 하시고 황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역자하고는 협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첩사에서는 11월 29일 날 오후에 사령관과 참모장이 모여서 계엄 이후에 검토·숙의를 했고 12월 1일 날은 대령급 이상 실무자의 휴가자들 전원 복귀 명령을 했고 12월 2일 날은 방첩 인원들이 다, 방첩사 요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집무실에서 참모 1차장과 6명 정도가 모여서 수사단 파견에 대해서 아주 깊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첩보를 받기로는 익일 날 12시 25분에 받았습시다라는 국정원 1차장께서 증언으로 했던 이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께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 더 소상히 말씀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1차 대상자는 이재명 대표,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였고, 이 세 분이 1차적으로 최우선 대표였고 나머지 11명, 14명입니다라는 11명은 우선 체포대상자였다고 합니다. 여인형 씨는 즉각 체포자 리스트를 1차와 2차에서 구분한 이유와 이 14명에 대해서 소상히 이름과 직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서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이 장관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 주모자에 대해서는 분리파견할 것이 아니라 이 반란자의 공모자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을 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증거 인멸과 여러 가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화국에서 두 번째 죄를 저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관련자의 보직 해임은 물론, 이미 보직 했습시다라는 이 자들에 대해서 즉각 신병을 확보해서 구금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방첩사에서 계엄 관련 여타의 자료를 모조리 지금 폐기 중이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만큼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하고 현장 보존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방위에서 중심을 잡아 주셔서 가지고 이런 내란 주모자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않도록 또 국방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상조사 및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이 상임위를 통해서 합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통제소를 방문을 했고 지휘통제소에서 다양한, 격노와 그리고 제2차 계엄에 대한 그리고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당시,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윤 대통령의 지휘통제소 방문 당시에 지휘통제소에 있었던 모든 관계 인력에 대한 리스트와 당시 상황에 대한 상황일지들을 속히 국방위에 제출을 해 줄 것을 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엄 시의 명령체계상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계엄사의 지휘 명령 체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그다음에 서울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우리 국방위 이름으로 지금 국방 권한대행이나 정부 부처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계엄사 부사령관이 합참차장 정진팔인데 이번에 직무정지가 안 됐습니다. 똑같은 공범선상에 있는 그런 지휘체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진팔 부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도 아울러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국가수사본부의 합동수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검찰에서도 파견한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회 차원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특검으로 내란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체제로 빨리 조속하게 전환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상임위가 재소집되어서 여러 증인들에 대한 현안질의가 다시 진행된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별도 상임위 차원에 있어서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위원장께서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승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하나만……

○위원장 성일종 예?

○허영 위원 마저 1분만, 30초만 더……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1분.

○허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좀 더 드리십시오.

○허영 위원 저는 충암과 3인에게 이 엄청난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의 책임 추궁과 그리고 법적·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 사태를 만들어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 국무위원 그리고 군 지휘체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 양심선언 이런 것 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상임위도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단죄 의식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다양한 말씀과 의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상임위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쿠데타 세력들의 반란은 국민들과 그리고 양식 있는 군인들이 아니었으면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허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서 ‘왜 국회 하나 제대로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방부장관이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질 테니 제2차 계엄을 발령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세 시간 정도 2차 계엄과 관련된 검토도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밝혀내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 차원에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반란 세력들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번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불출석하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출석이 필요한 증인을 제가 나열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그리고 김선호 차관, 이영빈 기획조정실장,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김경욱 기획관리관, 홍창식 법무관리관, 김철진 군사보좌관, 전하규 대변인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에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정진팔 계엄사 부사령관이자 합동참모차장, 원철회 국방정보본부장, 이승오 작전본부장, 강동길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작전부장, 허태선 민군부장, 권영환 계엄과장, 육군에서는 박안수 총장, 기타 부대장으로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광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과 함께 이번 계엄을 총괄했던 방첩사 수사단장, 방첩사 1차장,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박헌수 국방조사본부장,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 남진오 21사단장, 박진원 9사단장, 김광석 35사단장,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 특전사 707특임단장,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정원장과 국정원 1차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반란 세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간의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다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민석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조국 추미애 허영
황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